

##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 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3/
----------	----

제출년월일 : 2003. 6. 23

발 의 자 : 배도순의원 외2인

## 1. 제안 이유

-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제점과 부당함을 지적하고 지역주민의 거센발발과 항의에 뜻을 같이 하여 달성군의회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지역개발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검토 조정되어야함을 강력히 주장코자 반대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 3. 주요결의내용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계획을 전면 상향조정
- 읍·면소재지등 개발여력이 풍부한지역은 제3종 내지 제2종으로 상향조정
- 건축물의 용적율은 법적 상한선으로 조정

붙 임 :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 반대결의문 1부. 끝.

-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

## 도시관리계획(안) 반대 결의문

대구광역시에서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체계적인 개발유도를 명목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제1, 2, 3종으로 세분화 계획을 하면서, 지역특성과 실정을 무시하고 일반주거지역 면적의 약 90퍼센트를 제1종 주거지역으로 과다하게 계획을 한 것은

달성군 지역주민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침해된 지역경제를 수렁으로 몰아가며, 순박한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므로 대구시의 주거지역 세분화(안)을 적극 반대하는 바이며, 재검토 조정을 위해 달성군의회 의원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는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세분 계획을 전면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둘째, 읍·면소재지와 국도변, 달성산업단지내 주거지역 등 개발 여력이 풍부한 주요 간선도로변은 제3종 내지 제2종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셋째,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안)에서 건축물의 용적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 법적 상한선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위 결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대구광역시에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 6. .

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 의원일동

## 【대구광역시도시관리계획안반대결의안】

- 裴道淳議員 外 2人 發議 -

##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배 도 순	배도순	
김 삼 도	김삼도	
유 판 호	유판호	